

# 전주시, 폐열 판매 “특혜시비”

## 지역기업 2사에 350억원 지원 ... 안전성 확보 문제도 제기

전주시가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증기)을 국내기업에게 판매하려는 계획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업 2사에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불거진데 이어 안전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는 완산구 상림동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36만톤의 폐열을 생산해 자체 사용하고 남은 대부분을 전력거래소에 연간 19억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익을 늘리고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폐열을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 등 2곳에 판매하기로 조만간 해당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업들은 폐열을 활용함으로써 톤당 4만5000원대인 생산단가를 1만2000원대로 70% 가량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열 매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은 “전주시가 지하관 매설과 유지비로 관련기업에게 3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미숙 의원은 “지하관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350억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특혜 의혹이 있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전주시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도 소각장의 폐열을 기업체에 파는 것보다 전주시나 공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나 전주시가 무시하고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정기업 편향적인 사업의 중단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증기는 200도의 고온이기 때문에 지하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주혁신도시를 지나는 도로에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시설과 함께 매설되는 관로는 증기 이송 중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500m마다 지하 맨홀을 만들어 용수를 배출하고 지상으로 수증기가 나와 화상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관로가 있는 서울 마포나 인천 청라, 대구 성서, 광주 상무지구 등은 대부분 관로 길이가 1km 안팎인데 반해 전주는 8km에 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형원 전주시 자원위생과장은 “전주시나 공기업이 관로를 묻는 것이 타당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관련기업에게 공사를 맡긴 뒤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인 만큼 절대 특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2>